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2025회계연도 대전시 결산 분석

재정 구조와 '재정위기' 진단, 그리고 이월 실태

- 일시 : 2026년 9월 4일
- 작성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
- 담당 : 김재섭 사무처장 (010-9355-3697 / 042-331-0092)

목 차

요약 — 대전광역시 재정 상태 진단과 관리 방향 3

1. 법정 기준으로 본 대전시의 현재 위치 3
2. 문제의 본질 — 세입 부족이 아니다 3
3. 결산심사에서 검증해야 할 세 가지 4
4. 재정 건전화를 위한 관리 방향 4

I. 분석 개요 6

1. 분석 배경과 확보한 자료 6

II. 2025회계연도 결산 총괄 7

1. 세입·세출 개요 7
2. 세입은 무엇이 늘었나 — 구성별 증감 7
3. 스스로 버는 돈은 늘었나 — 자체수입 5년 추이 8
4. 회계별 집행 실태 9

III. '재정위기'는 어디까지 왔나 — 법정 기준과의 거리 11

1. 민선9기의 재정 진단 11
2. 채무 규모와 증가 속도 11
3. 법정 기준과 대전의 위치 11
4. 지방채 발행 한도 14
5. 결산이 뒷받침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14

IV. 이월 실태 — 대표 사례 두 건 16

1. 도시철도(트램) 이월 1,037억 원 — 빚으로 편성하고 넘긴 돈 16
2. 하수도 이월 719억 원 — 재이월의 반복 18

3. 국비는 집행, 시비는 이월 19

V. 부채 구조 — 대전도시공사 20

1. 지방공사·공단 부채 증가의 실체 20
2. 세입의 절반이 벌린 돈 20
3. 본예산 밖에서 조달되는 사업 자금 21

VI. 10년 재정 추이(2016~2025) 22

1. 몸집은 2배, 빛은 그보다 빠르게 22
2. 지출 구조의 변화 22
3. 공사 부채의 단절적 증가 23

VII. 종합 진단 24

VIII. 확인·요구 사항 25

1. 대전도시공사 차입금 5,546억 원의 사업별 내역과 상환계획 25
2. 공기업특별회계(상수도·하수도)의 미집행과 이월 이유 25
3. 2025회계연도 성과보고서와 재정혁신 71개 사업 목록 25
4. 도시철도 2호선 이월 사유와 자금 흐름 25
5. 채무 1조 5,864억 원의 상환계획과 미확인 재정지표 26

첨부 1. 예산현액 50억 원 이상·집행률 60% 미만 사업 (2025년, 18건) 27

첨부 2. 3년 연속(2023~2025) 집행률 70% 미만 사업 (2025년 예산현액 50억 원 이상, 11건) 28

요약 — 대전광역시 재정 상태 진단과 관리 방향

1. 법정 기준으로 본 대전시의 현재 위치

지방재정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기준을 적용하면, 대전광역시는 현재 '재정주의단체'와 '재정위기 단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법정 재정위기 상태는 예산대비 채무비율·통합재정수지비율 등 여섯 개 지표로 판정하는 공식 지정 절차이며, 대전시는 이 가운데 **확인 가능한 다섯 개 지표에서 어느 것도 주의 구간에 들어와 있지 않다**(금고잔액비율은 원천 자료가 없어 판정하지 못했다). 2025년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18.5%로 추정되어 주의 기준(25% 초과)까지 6.5%p 남았고, 2024년 공시된 통합재정수지비율 △5.51%는 주의 기준(△25% 초과)의 5분의 1 수준이다.

그러므로 '재정위기'라는 표현을 쓸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 말은 **법령상 지정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이기도 하다**. 일반적인 의미의 재정 어려움과 법정 지정 상태를 구분하지 않으면 시민에게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을 준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시가 재정 상황을 설명할 때 두 개념을 분명히 구분해 밝힐 것을 요청한다.

2. 문제의 본질 — 세입 부족이 아니다

결산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한 결과, 현재 재정 문제의 본질은 세입이 줄었거나 재원이 총량적으로 부족한 데 있지 않다. **2025년 세입은 예산현액의 101%가 들어왔고, 규모로도 전년보다 10.8% 늘었다**.

문제는 두 가지가 겹친 데 있다.

첫째, **스스로 버는 돈이 제자리다**.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은 5년 사이 7.0% 늘어 세출 증가(14.8%)의 절반에 못 미쳤고,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34%에서 **34.39%로 떨어졌다**. 2025년 세입 증가 8,056억 원 가운데 7,922억 원(98.3%)이 국고보조금이었다. 규모는 커졌지만 시가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은 늘지 않았다.

둘째, **빛으로 추진한 대형 사업의 집행이 계획을 따라가지 못한다.** 채무는 2025년 말 1조 5,864억 원으로 3년 만에 58% 늘었다. 대표 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은 2025년 예산의 32%를 집행하지 못했고, 개통은 2030년 하반기로 미뤄졌다는 보도가 있다. 남은 사업비가 1조 2,000억 원대여서 앞으로 몇 년간은 연간 집행 규모를 크게 늘려야 하며, 그만큼 추가 차입 가능성도 커진다. **최근 5년 평균 채무 증가 속도(연 1.7%p)가 이어지면 약 4년 뒤 법정 주의 기준선에 닿는다.**

여기에 시 본청 밖의 부담이 추가된다. 공사·공단 4곳의 부채는 한 해에 5,708억 원에서 9,591억 원으로 68% 늘었고, 그 증가의 대부분이 대전도시공사 한 곳에서 나왔다. 도시공사는 2025년 세입의 50.8%인 5,546억 원을 차입으로 조달했다. **본청 기준 법정 지표에는 이 부담이 잡히지 않는다.**

3. 결산심사에서 검증해야 할 세 가지

따라서 이번 결산심사와 재정 평가의 핵심 의제는 "돈이 없느냐"가 아니어야 한다. 다음 세 가지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첫째, 자체수입을 늘릴 방안이 실효성이 있는가. 지방세는 2022년 수준을 3년째 회복하지 못했고 자체수입 비율은 5년 연속 떨어졌다. 세입 기반 확충 계획과 그 이행 실적이 확인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채로 추진하는 대형 투자사업의 집행 계획이 현실적인가. 연차별 자원 조달 대책과 함께 확인되어야 한다. 2025년 이월 3,679억 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도시철도와 하수도 두 회계에서 나왔고, 예산현액 50억 원 이상이면서 집행률이 60%에 못 미친 사업이 18건, 그중 3년 연속 저집행이 11건이다(첨부 1·2).

셋째, 지방공기업과 산하기관 부채를 포함한 시 전체의 실질적 통합 재정 부담이 얼마인가. 도시공사 차입 5,546억 원의 사업별 내역과 상환계획은 결산서에 총액만 적혀 있다.

4. 재정 건전화를 위한 관리 방향

대전시가 법정 재정위기 단계로 들어가지 않으려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중장기 재정계획과 연계해 대형 사업의 우선순위를 엄격히 재조정해야 한다. 2026년 7월 발표된 재정혁신 방안이 그 첫 단계라면, 조정 대상 71개 사업의 목록과 판단 근거가 공개되어 결산에서 확인된 저집행 사업과 대조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사업 일정 지연에 따른 이자 부담과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 2025년 도 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지방채 973억 원을 모두 하반기에 발행했고, 그중 590억 원은 연말까지 9일 밖에 남지 않은 시점의 조달이었다. 조달과 집행의 시점이 벌어지면 쓰지 않은 돈에 이자가 붙는다. 다만 2025년 이 회계의 실제 이자 지출은 연초 편성액과 거의 같아 기존 채무의 이자로 보이며, 신규 발행분의 이자 부담은 2026년 결산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청 채무와 산하기관 채무를 함께 관리하는 통합 부채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시 지방채는 의회 의결과 공시를 거치지만 공사의 차입은 그 밖에 있다. 재정 위험이 시 전체로 옮겨오는 것을 막으려면 이 사각지대를 먼저 메워야 한다.

I. 분석 개요

1. 분석 배경과 확보한 자료

대전광역시는 2026년 9월 대전광역시의회 결산심사를 앞두고 「2025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그 심사에 앞서 시민의 관점에서 확인해야 할 지점을 정리한 것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분석대상은 아래와 같다.

- 2025회계연도 결산서(964쪽), 결산서 첨부서류 수정본(602쪽), 기금결산보고서(80쪽), 2026년 제1회 추경 사업별 설명자료
- 보조 자료: 지방재정365 공식 결산 지표(2016~2024년), 나라장터 계약 공개자료, 대전참여자치 시민연대 자체 데이터베이스

II. 2025회계연도 결산 총괄

1. 세입·세출 개요

2025회계연도 대전시 세입은 8조 2,707억 원, 세출은 7조 7,132억 원이다. 전년 대비 세입은 8,056억 원(10.8%), 세출은 7,921억 원(11.4%) 늘었다.

<표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구분	2025년	2024년	증감	증감률
예산현액	8조 2,179억	7조 4,351억	+7,828억	+10.5%
세입 결산	8조 2,707억	7조 4,651억	+8,056억	+10.8%
세출 결산	7조 7,132억	6조 9,211억	+7,921억	+11.4%
다음연도 이월액	3,679억	3,604억	+75억	+2.1%
집행잔액(불용)	1,368억	1,536억	△169억	△11.0%
결산상 잉여금	5,575억	5,440억	+135억	+2.5%
순세계잉여금	2,047억	1,828억	+219억	+12.0%

출처: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2)-3 세출결산 및 (2) 전년대비 세입·세출결산 현황

주: 다음연도 이월액 3,679억 원은 (2)-3 세출결산 기준이다. 결산서 총괄표(2-1)에는 자금없는 이월 249.43억 원을 뺀 3,429.86억 원이 적혀 있어, 같은 결산서에서 두 값이 함께 쓰인다.

순세계잉여금 2,047억 원은 초과세입 528억 원과 집행잔액 1,519억 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몫 1,442억 원의 사용계획은 채무상환 800억 원, 기금 적립 0원, 사업재원 642억 원이다. 남은 돈을 기금으로 쌓지 않고 전액 상환과 사업에 쓰는 구조다.

2. 세입은 무엇이 늘었나 — 구성별 증감

세입이 8,056억 원 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정이 좋아졌는지 알 수 없다. 누가 준 돈이 늘었는지를 봐야 한다.

<표 2> 세입 과목별 증감 (단위: 억원)

과목	2025 결산	2024 결산	증감액	증감률	2025 구성비	2024 구성비
국고보조금 등	30,146.7	22,225.1	+7,921.6	+35.7%	36.45%	29.78%
지방세	21,735.1	20,323.0	+1,412.1	+7.0%	26.28%	27.23%
지방교부세 등	11,020.1	11,192.3	△172.2	△1.5%	13.32%	14.99%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388.2	11,616.3	△1,228.1	△10.6%	12.56%	15.57%
세외수입	6,708.0	6,273.3	+434.6	+6.9%	8.11%	8.40%
지방채	2,709.0	3,021.0	△312.0	△10.3%	3.28%	4.05%
합계	82,707.0	74,651.1	+8,055.9	+10.8%	100%	100%

출처: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3) 재원별·경제성질별 결산액(인쇄 17쪽), 2024년은 지방재정365 재원별 세입결산(대전본청). 두 해의 총액이 각각 결산서 기재값과 일치함을 확인해 같은 기준임을 검증했다.

주: 세입 결산의 지방채 2,709억 원은 기금을 제외한 값이다. 지역개발기금 소관인 지역개발채권 717억 원을 더하면 지방채 발행보고서상 발행액 3,426억 원과 일치한다.

세입 증가 8,056억 원 가운데 7,922억 원(98.3%)이 국고보조금 증가분이다. 지방세는 1,412억 원, 세외수입은 435억 원 늘었지만, 지방교부세(△172억)·지방채(△312억)·보전수입 등(△1,228억)이 줄어 증가분을 상쇄했다. 결과적으로 2025년 세입 증가는 사실상 중앙정부에서 온 국고보조금 하나가 만들었고, 대전시가 자체로 조달한 재원의 기여는 23% 수준이다.

국고보조금은 쓰임이 정해져 있어 시가 재량으로 쓸 수 없는 돈이다. 세입 규모가 커진 것을 곧 살림살이가 나아진 것으로 읽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3. 스스로 버는 돈은 늘었나 — 자체수입 5년 추이

지방정부 재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체수입(지방세 + 세외수입)이다. 스스로 거둔 돈이라 용도를 시가 정할 수 있고, 이 비중이 커질수록 중앙정부 의존이 줄어든다.

<표 3> 대전시 자체수입 5년 추이 (단위: 억원)

연도	지방세	세외수입	자체수입	세입 총액	자체수입 비율	세출 총액	재정자립도
2021	21,144.8	5,428.9	26,573.7	73,128.1	36.34%	67,163.7	37.64%
2022	21,741.0	5,924.2	27,665.2	75,724.4	36.53%	69,305.6	37.93%
2023	20,121.1	5,792.8	25,913.9	71,561.3	36.21%	65,122.5	38.38%
2024	20,323.0	6,273.3	26,596.3	74,651.1	35.63%	69,211.0	37.32%
2025	21,735.1	6,708.0	28,443.0	82,707.0	34.39%	77,131.8	약 34%[추정]
5년 증감	+590.3	+1,279.1	+1,869.3 (+7.0%)	+9,579.0 (+13.1%)	△1.95%p	+9,968.1 (+14.8%)	—

출처: 지방세·세외수입·세입 총액은 지방재정365 재원별 세입결산(2021~2024)과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3)(2025년). 세출 총액은 지방재정365 및 결산서. 재정자립도는 지방재정365 재정자립도결산 공시값(신산식). 2025년은 아직 공시되지 않아 추정치다 — 공시 산식의 분자(일반회계 자체수입)는 2025년 확정치 2조 4,455억 원이 확인되나 분모가 특정되지 않아(일반회계 예산현액의 92~97% 사이에서 연도별로 변동) 2024년 관계를 적용한 근사치다. **확정 지표인 자체수입 비율(34.39%)을 먼저 보시기를 권한다.**

읽는 법은 이렇다.

- **절대 금액은 늘었다.** 자체수입은 5년 사이 2조 6,574억 원에서 2조 8,443억 원으로 **1,869억 원 (7.0%)** 늘었다.
- **그러나 비율은 줄었다.** 세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34%에서 **34.39%로 1.95%p 떨어졌다.** 세입 총액이 13.1% 늘어 자체수입 증가 속도(7.0%)의 두 배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 **살림 규모가 자체수입보다 두 배 빠르게 커졌다.** 세출은 5년간 14.8% 늘었다. 자체수입 증가 (7.0%)의 두 배가 넘는다.
- 지방세는 2022년 2조 1,741억 원에서 2023년 2조 121억 원으로 한 번 꺾였고(부동산 경기 침체), 2025년 2조 1,735억 원으로 **2022년 수준에 근접했으나 아직 5.9억 원(0.03%) 못 미친다.** 3년이 지나도 2022년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 셈이다.

<표 4> 6개 광역시 자체수입 비율 비교 (2024년)

도시	지방세	세외수입	세입 총액	자체수입 비율
인천	4조 7,173억	2조 5,608억	16조 6,712억	43.66%
울산	1조 7,996억	5,252억	5조 7,842억	40.19%
대구	3조 4,727억	8,499억	11조 5,958억	37.28%
부산	5조 3,268억	1조 3,431억	17조 9,115억	37.24%
대전	2조 323억	6,273억	7조 4,651억	35.63%
광주	2조 579억	4,971억	8조 888억	31.59%

출처: 지방재정365 재원별 세입결산, 6개 광역시 본청 2024년 기준. 공시지표로 산출한 값이다.

대전은 6개 광역시 중 다섯째다. 광주만 대전보다 낮다. 재정자립도 순위(6개 중 5위)와 방향이 같다.

정리하면, 대전시가 스스로 버는 돈은 금액으로는 조금씩 늘고 있지만 살림이 커지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비중은 오히려 줄고 있다. 세입이 10.8% 늘어난 2025년에도 그 증가의 98%가 국고보조금이었다.

4. 회계별 집행 실태

전체 집행률은 93.9%다. 그러나 회계별로 나누어 보면 편차가 크다. 일반회계는 96.8%를 집행한 반면, 특별회계는 81.6%에 그쳤다.

<표 5> 회계별 집행률과 이월액

회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다음연도 이월
합계	8조 2,179억	7조 7,132억	93.9%	3,679억
일반회계	6조 6,301억	6조 4,168억	96.8%	1,446억
특별회계 계	1조 5,878억	1조 2,964억	81.6%	2,233억
공기업특별회계	4,647억	3,326억	71.6%	1,004억
상수도사업	1,834억	1,372억	74.8%	286억
하수도사업	2,813억	1,954억	69.5%	719억

회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다음연도 이월
기타특별회계	1조 1,231억	9,638억	85.8%	1,229억
도시철도사업	3,211억	2,173억	67.7%	1,037억
산업단지	423억	268억	63.3%	136억
소방	2,219억	2,153억	97.0%	26억

출처: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2)-3 세출결산

집행률이 낮은 회계는 도시철도사업(67.7%), 하수도사업(69.5%), 산업단지(63.3%)다. 이 세 회계의 이월액만 1,892억 원으로 전체 이월액의 51.4%를 차지한다. 특히 도시철도사업과 하수도사업 두 회계가 1,756억 원으로 절반에 육박한다.

세부사업 단위로 보면, 예산현액 50억 원 이상이면서 집행률이 60%에 못 미친 사업이 **18건**이다. 이 가운데 3년 연속 집행률 70% 미만인 사업이 **11건**이며, 11건 전부가 18건 안에 들어 있다. **사업별 명단은 첨부 1·2에 실었다.**

가장 낮은 세 사업은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0.9%),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4.3%),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6.2%)이다. 3년 연속 저집행 11건 가운데 국민체육센터 건립 두 사업은 3년 내내 30%를 넘지 못했고, 외삼~유성복합터미널 도로와 평촌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도는 3년 연속 50%대 이하다.

주: 본청 기준(5개 자치구 자체 예산 제외)으로, 조건을 충족하는 26건에서 금융기관 예치금·기금 예탁·예비비 등 회계기술 계정 8건을 제외한 값이다. 3년 연속 건수는 조인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 사업코드로 연결하면 11건이지만 사업명 문자열로 연결하면 7건이 된다. 국민체육센터 2건·대전추모공원·평촌 공업용수도처럼 **연도마다 사업명이 바뀐 사업이 명칭 조인에서는 탈락**하기 때문이며, 이 보고서는 사업코드 조인(11건)을 썼다.

III. '재정위기'는 어디까지 왔나 — 법정 기준과의 거리

1. 민선9기의 재정 진단

민선9기 대전시는 출범 초부터 재정 상황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2026년 7월 30일에는 **재정위기**를 선언하고 **71개 사업(종료 8·장기재검토 29·재원조정 34)**을 조정한다고 발표했으며, 세입 부족을 연 5,400억~7,000억 원 규모로 제시했다. "돈이 없다"는 진단이 시 정책 전반의 전제가 된 셈이다.

시민 입장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두 가지다. **첫째, 그 진단이 결산 수치로 뒷받침되는가. 둘째, 법이 정한 기준으로 보면 대전은 어디쯤 있는가.**

2. 채무 규모와 증가 속도

2025년 말 대전시 본청 채무는 **1조 5,864억 원**이다. 2024년 말 1조 3,974억 원에서 3,426억 원을 발행하고 1,536억 원을 상환한 결과다.

- 2019년 5,960억 원 → 2025년 1조 5,864억 원. **6년 만에 2.66배**가 됐다.
- 같은 기간 세출은 5조 565억 원 → 7조 7,132억 원으로 1.53배 늘었다. **빚이 살림보다 훨씬 빠르게 늘었다.**
- 2022년 말 1조 43억 원과 비교하면 3년 만에 **58%** 늘었다.

증가 속도만 보면 진단은 근거가 있다. 다만 규모가 위험 수준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며, 그것을 판단하는 법정 기준이 따로 있다.

3. 법정 기준과 대전의 위치

지방재정법 제55조의2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정위험 수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구체적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3에 여섯 가지 지표로 정해져 있다.

<표 6> 재정위기단체·재정주의단체 지정 기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의3)

지표	재정주의단체	재정위기단체
통합재정수지비율	음수이고 절대값 25% 초과 ~ 30% 이하	음수이고 절대값 30% 초과
예산대비 채무비율	25% 초과 ~ 40% 이하	40% 초과
채무상환비 비율	12% 초과 ~ 17% 이하	17% 초과
지방세징수액 비율	70% 이상 ~ 80% 미만	70% 미만
금고잔액비율	10% 이상 ~ 20% 미만	10% 미만
공기업 부채비율	400% 초과 ~ 600% 이하	600% 초과

출처: 지방재정법(법률) 제55조의2, 지방재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65조의3. 2026년 9월 3일 현행 조문 확인.

이 기준에 대전시의 실측치를 대 보면 다음과 같다.

<표 7> 대전시 재정지표 추이와 법정 기준 대비

연도	통합재정수지 비율	예산대비 채무비율	공기업 부채비율	보증채무비율	지방세징수율
2018	+3.37%	10.17%	24.54%	2.46%	96.2%
2019	+4.12%	8.83%	22.84%	2.18%	96.8%
2020	△6.09%	10.39%	24.51%	1.85%	97.1%
2021	△2.35%	10.45%	확인 불가	1.77%	97.3%
2022	+2.00%	12.08%	23.86%	1.70%	96.8%
2023	△3.62%	15.65%	확인 불가	1.79%	95.9%
2024	△5.51%	17.50%	20.64%	1.66%	95.6%
2025	산출 보류	18.5% [추정]	47.0% [추정·모집단 상이]	1.46% [추정]	산출 보류
주의 기준	△ 25% 초과	25% 초과	400% 초과	—	80% 미만

출처: 2018~2024년은 지방재정365 공시지표(통합재정수지비율결산·예산대비채무비율·지방공기업부채비율·보증채무비율· 시도별징수율), 대전본청 기준. 2025년은 아직 공시되지 않아 각 지표의 공시 산식을 2024년 이전 공시값에서 역산해 확정 한 뒤 2025년 결산 수치에 적용한 추정치다.

주 1) 예산대비 채무비율: 공시 산식의 분모는 기금을 포함한 전체회계 예산현액 총계임을

2022~2024년 값에서 확인했다(오차 0.2~0.6%). 2025년은 채무 1조 5,864억 원 ÷ 8조 5,866억 원 = 18.5%다.

주 2) 통합재정수지비율: 이 지표는 결산서에 원표가 없고 행정안전부가 별도 산식으로 산출해 공시한다. 우리가 결산서 재원별 결산액으로 같은 산식을 재구성해 보았으나, **2024년 공시값(△5.51%)을 재현하지 못했다**(재구성 결과 △5.19%, 지출 항목에서 217억 원 차이). 산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5년 값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산출을 보류했다**. 2025년 값은 지방재정365 공시 후 확인해야 한다. 참고로 2024년 공시값 △5.51%는 주의 기준(△25% 초과)의 5분의 1 수준이다.

주 3) 공기업 부채비율: 공시 산식은 부채÷자기자본이다. 다만 공시 계열의 대상 기관 범위가 결산서 지역통합재정통계(공사 3곳·공단 1곳)보다 넓어(2024년 공시 부채 7,466억 vs 결산서 4곳 5,708억), 결산서 기준으로 계산한 47.0%는 앞 연도와 이어서 볼 수 없다. 어느 기준이든 주의 기준 400%에는 크게 미달한다.

주 4) 지방세징수율: 공시 계열은 대전광역시 전체(본청+5개 자치구) 기준이다. 2025년 값을 산출하려면 징수결정액이 필요하고 그 구성 요소인 정리보류액·미수납액을 지방세 항목만으로 분해해야 하는데, **그 분해표를 우리가 확보한 자료에서 찾지 못해 산출을 보류했다**. 2024년 공시값 95.6%는 주의 기준(80% 미만)을 크게 상회한다.

주 5) 보증채무: 2025년 말 잔액 1,249.7억 원은 결산서 첨부서류 「(10) 보증채무 현재액」(인쇄 169쪽)에서 원문 확인했다. 전년 말 1,309.7억 원.

여섯 개 법정 지표를 2025년 기준으로 모으면 다음과 같다.

<표 8> 2025년 법정 지표 추정치와 기준 대비

법정 지표	2025년 [추정]	주의 기준	위기 기준	기준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	산출 보류(공시 전)	△25% 초과	△30% 초과	2024년 공시값 △5.51%은 기준의 5분의 1
예산대비 채	18.5%	25% 초과	40% 초과	주의 기준까지 6.5%p

법정 지표	2025년 [추정]	주의 기준	위기 기준	기준 대비
무비율				
채무상환비 비율	약 4.6~4.8%	12% 초과	17% 초과	기준의 약 5분의 2
지방세징수 액 비율	산출 보류(분모 자료 부재)	80% 미만	70% 미만	2024년 공시값 95.6%로 기준을 크게 상회
금고잔액비 율	산출 불가	20% 미만	10% 미만	-
공기업 부채 비율	47.0%	400% 초 과	600% 초 과	기준의 약 8분의 1

출처: 위 표 7과 같다. 산출을 보류한 두 지표는 각각 산식 미확정(통합재정수지비율)과 분모 자료 부재(지방세징수액 비율) 때문이며, 확정값은 결산심사와 지방재정365 공시로 확인해야 한다. 채무상환비 비율은 2025년 채무 원금상환 1,535.78억 원(결산서 채무관리보고서)과 이자상환 262.7억~375.9억 원(현금주의 결산액과 발생주의 이자비용의 차이)을 일반재원 3조 9,463억 원(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 등)으로 나눈 값이다 [추정]. 금고잔액비율은 공시 지표에도, 우리가 확보한 결산서에도 원천 자료가 없어 산출하지 못했다.

2025년 값을 산출한 세 지표(예산대비 채무비율·채무상환비 비율·공기업 부채비율)와, 2024년 공시값이 있는 두 지표(통합재정수지비율·지방세징수액 비율) 모두 재정주의단체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 여섯 지표 가운데 **금고잔액비율을 뺀 다섯 지표는 어느 것도 주의 구간에 들어와 있지 않다.** 금고잔액비율은 원천 자료가 없어 판정하지 못했으므로, '전 지표 안전'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다.

- 통합재정수지비율은 2024년 $\triangle 5.51\%$ 인데 주의 기준은 $\triangle 25\%$ 초과다. 기준의 5분의 1 수준이다.
-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024년 17.50%, 2025년 18.5%[추정]로 주의 기준 25%까지 약 6.5%p 남았다.
- 공기업 부채비율은 2024년 공시값 20.64%로 주의 기준 400%와는 거리가 매우 멀다. 2025년은 결산서(공사 3곳·공단 1곳) 기준으로 47.0%[추정]이지만 공시 계열의 대상 기관 범위가 이보다 넓어 앞 연도와 이어서 볼 수 없으므로, 추세 판단에는 2024년 공시값을 쓴다.
- 지방세징수율은 95.6%로 주의 기준(80%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다.
- 채무상환비 비율은 2025년 약 4.6~4.8%로 추정되며 주의 기준(12% 초과)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다만 하나는 분명히 짚어야 한다. **예산대비 채무비율만 뚜렷한 상승 추세다.** 2019년 8.83%에서 2024년 17.50%로 5년 만에 두 배가 됐고, 2025년 추정치는 18.5%다. 최근 5년 평균 상승 속도(연 1.7%p)가 이어지면 약 4년, 최근 1년 속도(연 1.0%p)면 약 6년 뒤 주의 기준에 닿는다[추정]. 위험 구간에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방향은 그쪽을 향하고 있다.

한편 **금고잔액비율은 산출하지 못했다.** 지방재정365 공시지표에 해당 항목이 없고, 우리가 확보한 결산서에도 금고 예치잔액을 명시한 표가 없다. 채무상환비 비율도 공시 항목이 없어 결산서 수치로 추정할 수밖에 없었다. 두 지표의 확정값은 결산심사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4. 지방채 발행 한도

지방재정법 제11조 제2항은 지방채를 **발행 한도액 범위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발행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10조 제2항은 그 한도를 **전전연도 예산액의 10%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도를 넘으려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일정 범위를 넘으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법 제11조 제3항).

2025년 대전시의 지방채 발행액은 3,426억 원이다. 전전연도인 2023년 대전시 세출 결산이 6조 5,123억 원이므로 한도는 6,500억 원 안팎으로 볼 수 있고, 발행액은 그 절반 수준이다 [추정]. **행정안전부가** 통보한 실제 한도액과 그 소진율은 우리가 확보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심사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5. 결산이 뒷받침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 **뒷받침되는 것:** 채무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진단이다. 6년에 2.66배, 3년에 58%는 살림 증가 속도를 크게 앞선다. 예산대비 채무비율도 5년에 두 배가 됐다. 여기에 산하 공사의 부채 증가(V장)까지 더하면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은 결산과 어긋나지 않는다.
- **뒷받침되지 않는 것:** '세입 부족'은 원인이 아니다. 2025년 세입은 예산현액 8조 2,179억 원 대비 8조 2,707억 원이 들어와 **수납률 101%**다. 걷을 돈이 안 들어온 해가 아니었다. 세입은 오히려

10.8% 늘었다.

- **법정 기준으로 보면** 대전은 재정위기단체·재정주의단체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재정위기'라는 표현은 법령상 지정 상태를 뜻하는 용어이기도 하므로, 정책 설명에서 쓸 때는 **법정 지정과는 다른 의미라는 점이 함께 밝혀져야** 시민이 오해하지 않는다.
-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돈이 안 들어온다"가 아니라 **"자체수입은 제자리인데 빚으로 벌인 대형 사업의 집행이 계획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데 있다.

IV. 이월 실태 — 대표 사례 두 건

2025년 다음연도 이월액은 3,679억 원이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1,756억 원이 도시철도사업(1,037억)과 하수도사업(719억) 두 회계에서 나왔다. 이 장은 그 두 건을 대표 사례로 본다. 두 사업을 고른 이유는 규모가 가장 크고, **이월의 성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트램은 빚으로 편성한 돈을 넘긴 경우이고, 하수도는 한 번 넘긴 돈을 다시 넘긴 경우다.

1. 도시철도(트램) 이월 1,037억 원 — 빚으로 편성하고 넘긴 돈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이월액 1,037억 원은 거의 전액(99.96%)이 도시철도 2호선(트램) 한 사업에서 발생했다. 계속비 총사업비는 1조 4,973억 원이다.

<표 9>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이월 내역

비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계속비이월액
시설비	3,010.9억	2,009.7억	66.8%	1,001.1억
감리비	138.9억	104.2억	75.1%	34.6억
시설부대비	4.0억	2.7억	68.3%	1.2억
계(3개 비목)	3,153.7억	2,116.7억	67.1%	1,036.9억

출처: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14)-2 이월사유별 현황 (인쇄 266쪽)

주: 이 표는 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 3개 비목의 합계다. 여기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예산 140.5억 → 변경 △90.35억 → 지출 50.18억)과 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 등 소액 항목(지출 0.74억)을 더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세부사업 전체** 기준으로는 예산현액 3,204.8억 원·지출 2,167.6억 원·집행률 **67.6%**가 된다(첨부 계속비 결산명세 인쇄 206~207쪽). 여기에 회계안의 다른 소액 세부사업(약 6억 원)까지 더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체** 기준이 표 5의 3,211억 원·2,173억 원·67.7%다. 세 기준이 함께 쓰이므로 인용할 때는 어느 기준인지 밝혀야 한다.

결산서에 기재된 이월 사유는 세 건 모두 다음 한 문장뿐이다.

'<25. 계속비 예산> 트램차량제작 및 공사 등 집행시기 미도래'

1,001억 원을 다음 해로 넘기면서 무엇이, 왜, 언제까지 미뤄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차량 제작과 공사 중 어느 쪽에서 얼마가 지연됐는지, 2026년에는 집행이 가능한지 판단할 근거가 결산서에 담겨 있지 않다.

이월액의 증가 속도도 주목할 만하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이월액은 2024년 127.6억 원에서 2025년 1,037.3억 원으로 **8.1배** 늘었다. 같은 기간 이 회계의 예산은 446억 원에서 3,211억 원으로 7.2배 늘었다. 예산을 크게 늘렸으나 집행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1) 같은 해 지방채 973억 원

2025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지방채 973억 원을 발행했다. 회계의 채무 잔액은 2024년 말 158억 원에서 2025년 말 **1,129억 원**이 됐다.

<표 10> 2025년 도시철도 2호선 관련 지방채 발행

발행일	금액	이율	조건	2025년 귀속 이자 [추정]
7월 25일	305억	2.75%	2년 거치 8년 상환	3.65억 (159일)
8월 27일	78억	3.123%	5년 거치 10년 상환	0.84억 (126일)
12월 22일	590억	2.71%	5년 거치 10년 상환	0.39억 (9일)
계	973억	가중평균 2.756%	—	약 4.89억

출처: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지방채 발행보고서(인쇄 551~554쪽). 2025년 귀속 이자는 발행 다음날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경과일수를 365일로 나눈 일수 계산 [추정].

이자 부담은 다음과 같다 [추정].

- **거치기간 중 연간 이자:** 973억 원 전액 기준 **약 26.8억 원/년**
- **만기까지 총 이자:** 약 **248억 원** (원금균등분할상환 가정. 결산서에 상환 방식이 명시되지 않아 관행을 가정했다)
-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채무 잔액 1,129억 원 전체로는 연 약 31억 원
- 참고로 2025년 발행 지방채 전체(37건 3,426억 원)의 가중평균 이율은 2.63%이며, 연간 이자는

약 90억 원 규모다

2) 집행잔액과 이자비용의 상관성

- 트램 시비 재원의 집행률은 21.6%(1,231.5억 중 266.5억)에 그쳤고 964.8억 원이 이월됐다.
- 지방채 973억 원은 전액 하반기(7월·8월·12월)에 발행됐다.
- 계속비이월액 가운데 **249.43억 원이 '자금없는 이월'**로 표기돼 있다. 세입이 뒤따르지 못한 이월이라는 뜻이다.
- **12월 22일 발행한 590억 원은 연말까지 9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의 조달이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비 지급은 계약·기성검사·지출결의 절차를 거치므로 9일 안에 실제 지출로 이어지기는 사실상 어렵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2025년 **순세계잉여금은 702원, 사실상 0원**이다. 오히려 계획한 세입이 **249.66억 원 부족**했다. 즉 이 회계에 쓰지 않은 현금이 남아돌았다고 보기 어렵다. "빌려서 예치해 두고 이자만 물었다"는 식의 해석은 어렵다.

또한 결산서에 기재된 이 회계의 2025년 실제 이자 지출은 **3억 7,472만 원**(차입금이자상환 예산 3.76억 원 대비)이다. 연초에 편성한 예산과 거의 같은 금액이어서, 하반기에 새로 발행한 973억 원의 이자가 아니라 **기존 채무의 이자로 보인다**. 신규 발행분의 이자는 2026년 결산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시의회 결산 심의과정에서 질의로 확인해야 하는 것

- 왜 12월 22일에 590억 원을 발행해야 했는가. 그 시점의 자금 계획상 필요는 무엇이었는가.
- 신규 발행 973억 원이 실제로 언제·어느 지출에 쓰였는가. 지방채 발행보고서의 사업명 표기는 예산 편성의 자원 배정일 뿐이고, 자치단체 회계는 계정별로 자금을 통합 관리하므로 특정 채권과 특정 지출의 대응 관계는 결산서로 추적할 수 없다.
- 신규 채권의 첫 이자 지급일과 금액은 얼마인가.

대전시는 트램 재원을 하반기에 몰아 조달했지만 실제 집행은 계획에 크게 못 미쳤고, 그 결과 249

억 원 규모의 자금 뒷받침 없는 이월이 생겼다. **조달 시점과 지출 시점의 괴리가 있었다는 정황은 뚜렷하다.** 다만 그것이 얼마의 불필요한 이자를 낳았는지는 결산서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이 지점이 결산심사에서 자금 흐름 자료로 확인되어야 하는 대목이다.

2. 하수도 이월 719억 원 — 재이월의 반복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이월액은 719억 원이며, 이 가운데 704억 원(98%)이 계속비이월이다.

이 704억 원의 사업별 내역과 이월 사유는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별책에 담기는데, 그 별책은 우리가 확보한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명세서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만을 대상으로 하고, 하수도는 공기업특별회계여서 그 명세서에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이월액 286억 원도 같다.

따라서 이월 704억 원의 사유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결산심사에서 의원이 공기업 결산 별책을 자료로 요구하고, 사업별 이월 사유·공정·수정 준공 시점을 질의로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

우리가 확보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보조금 기준 이월분이며, 전년도에서 이월된 949.7억 원 중 2025년에 집행된 금액은 382.9억 원(40.3%)에 그쳤고, 534.8억 원이 다시 이월됐다.

<표 11> 하수도 이월사업의 집행·재이월 현황

사업명	이월예산	집행액	재이월액	집행률
서구 도마·변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	68.9억	0원	68.9억	0.0%
서구 탄방2·가장2 도시침수 대응	58.0억	2만 원	58.0억	0.0%
노후관로(3단계 긴급 보수) 정비	97.6억	4.2억	93.4억	4.4%
서구 둔산1지역 도시침수 대응	28.9억	6.3억	22.6억	21.7%
대덕구 오정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	179.5억	61.0억	118.5억	34.0%
대전 1·2산단 하수관로 분류화	156.9억	80.0억	76.9억	51.0%
대전천 일원 하수관로 정비	117.3억	69.9억	47.4억	59.6%
중구 유천2지역 도시침수 대응	125.0억	75.8억	49.2억	60.6%
대전천 좌안·옥계동 상류 하수관로 정비	84.0억	56.3억	0원	67.0%
서구 복수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	33.6억	29.3억	0원	87.1%

사업명	이월예산	집행액	재이월액	집행률
계	949.7억	382.9억	534.8억	40.3%

출처: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17)-2 사업별 보조금 집행 현황 (인쇄 479~482쪽)

한 번 이월된 예산의 56%가 또 이월됐다. 사업명에 '긴급 보수'가 붙은 97.6억 원 규모 사업의 집행률이 4.4%에 그쳤고, '도시침수 대응' 사업 세 건 중 두 건은 집행률이 0~21.7%다. 서구 도마·변동은 집행이 정확히 0원, 서구 탄방2·가장2는 시설부대비 2만 원이 전부여서 **사실상 한 해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하수도 침수 대응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다. **왜 두 해 연속 진행되지 않았는지, 언제 착공하는지는 결산심사에서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사항이다.**

3. 국비는 집행, 시비는 이월

두 사업에서 공통된 양상이 나타난다. 국고보조금은 대부분 집행하고 시비는 이월하는 것이다.

<표 12> 국비·시비 집행률 대비

구분	국비 예산	국비 집행률	시비 예산	시비 집행률
도시철도(당해 보조사업)	1,846억	100.0%	1,231.5억	21.6%
하수도(이월 보조사업)	295.7억	68.6%	654.0억	27.5%

출처: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17)-1 보조금 집행 현황 총괄표, (17)-2 사업별 보조금 집행 현황

국고보조금은 정해진 기간에 쓰지 못하면 반납해야 하지만 시비는 이월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두 회계에서 같은 방향의 차이가 나타난 것이 우연인지, 국비 반납을 피하기 위해 집행 순서를 조정한 결과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V. 부채 구조 — 대전도시공사

1. 지방공사·공단 부채 증가의 실체

대전시 산하 지방공공기관의 부채는 2024년 7,182억 원에서 2025년 1조 413억 원으로 3,231억 원(45.0%) 늘었다. 이 가운데 공사 3곳과 공단 1곳을 합한 4개 기관의 부채는 5,708억 원에서 9,591억 원으로 3,883억 원(68.0%)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전시 본청 채무 증가액은 1,890억 원이므로, 이들 기관의 부채 증가가 본청의 2배를 넘는다.

<표 13> 지방공사·공단의 자산과 부채 (2025년 말)

기관	자산	부채	부채비율	장기차입부채
대전도시공사	1조 3,954.7억	8,576.3억	61%	6,206.4억
대전교통공사	1조 3,242.2억	541.8억	4%	0원
대전관광공사	2,692.7억	403.2억	15%	31.5억
대전시설관리공단	94.8억	70.2억	74%	0원
계	2조 9,984.4억	9,591.5억	32%	6,237.9억

출처: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18)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 2-7-3·2-7-4 부문별 재정상태

네 기관 부채 9,591억 원 가운데 8,576억 원(89%)이 대전도시공사 한 곳에 몰려 있다. 그중 장기차입부채가 6,206억 원이다.

2. 세입의 절반이 빌린 돈

<표 14> 대전도시공사 2025년 세입 구조

항목	금액	비중	비고
자체수입(사업수입 등)	1,634.9억	15.0%	
이전수입(국비·시비)	161.9억	1.5%	
차입금 수입(지방채 등)	5,546.1억	50.8%	지방공사 전체 차입금의 100%
잉여금·이월금 등	3,571.1억	32.7%	

항목	금액	비중	비고
세입 계	1조 914.1억	100%	

출처: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18)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 2-6-1 부문별 재정규모(세입)

세입의 절반이 넘는 5,546억 원이 빌린 돈이다. 더구나 2025년 대전시 지방공사가 조달한 차입금 전액이 대전도시공사 한 곳에서 발생했다. 관광공사·교통공사·시설관리공단의 차입금 수입은 모두 0원이다.

세출 쪽에서는 차입금 상환 등 보전재원이 1,701.3억 원이다. 빌린 5,546억 원에서 갚은 1,701억 원을 빼면 순증 3,845억 원으로, 공사 부채 증가액과 사실상 일치한다. 조달한 자금은 자본지출 4,360.4억 원(세출의 56.5%)으로 나갔다. 개발사업 투자다.

3. 본예산 밖에서 조달되는 사업 자금

2025년 대전시는 38개 사업에 3,426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같은 해 대전도시공사는 5,546억 원을 차입했다. **성격이 다른 두 주체의 조달이므로 하나로 합산하지는 않는다.** 다만 시가 직접 발행한 지방채보다 산하 공사가 빌린 돈이 1.6배 크다는 사실 자체는 짚을 필요가 있다.

시 지방채는 지방의회 의결과 공시 절차를 거치지만 공사의 차입은 그 밖에 있다. 재정 감시의 사각지대가 여기에 있다. 앞서 III장에서 본 법정 지표는 본청 기준이므로, 공사 부채 증가는 그 지표에 곧바로 잡히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2025년 발행한 지방채 중 규모가 큰 것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관련 973억 원(3건), 지역개발채권 717억 원(2건),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200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 191억 원 등이다.

이 가운데 '재난관리기금 전출' 191억 원은 짚어 둘 필요가 있다. 이 191억 원은 지방채로 조달해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넘긴 돈인데, 기금은 같은 해 196.7억 원을 지출했다. 그래서 기금 잔액은 602.7억 원에서 609.8억 원으로 7.2억 원만 늘었다. **비상금을 쌓은 것이 아니라 그해 써야 할 돈을 빚으로 메운 셈이다.** 이 지방채는 1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어서 2026년에 상환 재원이 필요하다.

VI. 10년 재정 추이(2016~2025)

1. 몸집은 2배, 빛은 그보다 빠르게

<표 15> 대전광역시 본청 결산 10년 추이

연도	세입	세출	세출 증감	채무 잔액	부채	재정자립도
2016	47,769억	37,909억	—	6,681억	10,491억	51.90%
2017	46,775억	41,491억	+9.4%	6,442억	10,053억	51.31%
2018	49,923억	44,051억	+6.2%	6,039억	9,034억	44.64%
2019	57,294억	50,565억	+14.8%	5,960억	9,520억	42.81%
2020	65,272억	58,055억	+14.8%	8,005억	11,764억	43.36%
2021	73,128억	67,164억	+15.7%	8,476억	11,054억	44.79%
2022	75,724억	69,306억	+3.2%	10,043억	12,704억	42.26%
2023	71,561억	65,123억	△6.0%	12,083억	14,805억	43.85%
2024	74,651억	69,211억	+6.3%	13,974억	16,484억	41.72%
2025	82,707억	77,132억	+11.4%	15,864억	17,856억	약 39%[추정]

출처: 2016~2024년은 지방재정365 결산 지표, 2025년은 2025회계연도 결산서(채무는 채무관리보고서 인쇄 949·951쪽). 채무 잔액은 회계별 잔액의 합계. 재정자립도는 구산식 공시값이며, 표 3의 신산식 값과는 산식이 다르다. 2025년은 미공시여서 추정치이며(구산식 약 39%·신산식 약 34%), 두 산식 모두 2024년보다 낮아지는 방향이다 — 분모에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예산 총액이 들어가는데 2025년 세입 증가의 98.3%가 국고보조금이었던 반면 일반회계 자체수입은 1.76% 늘어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세출은 10년 사이 3조 7,909억 원에서 7조 7,132억 원으로 2.03배가 됐다. 그런데 채무 잔액은 2019년 5,960억 원까지 줄었다가 2025년 1조 5,864억 원으로 6년 만에 **2.66배**가 됐다. 같은 기간 세출이 1.53배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빛이 살림보다 빠르게 늘고 있다.

주목할 해는 2023년이다. 10년 중 유일하게 세출이 줄어든 해(△6.0%)인데, 그 해에 채무 잔액은 오히려 1조 43억 원에서 1조 2,083억 원으로 2,040억 원 늘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가 줄자 부족분을 빛으로 메운 것이다.

2. 지출 구조의 변화

지출 구조를 보면 사회복지 비중이 2016년 36.48%에서 2024년 46.0%로 9.5%p 높아졌다. 사회복지 지출은 대부분 국비 매칭 사업이어서 시가 재량으로 조정하기 어렵다. 보조사업 비중도 44.7%에서 46.3%로 늘었다. **재정 규모는 커졌지만 시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예산의 여지는 오히려 좁아진 것이다.**

발생주의 기준으로 본 2025년 재정운영결과는 △2,339억 원으로, 전년 △1,454억 원보다 적자 폭이 커졌다. 재무제표상 부채는 1조 7,856억 원이다.

3. 공사 부채의 단절적 증가

<표 16> 대전 지역통합부채 추이 (자치구 포함)

연도	통합부채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2016	2조 1,479억	1조 1,779억	5,613억	4,086억
2019	1조 8,487억	1조 638억	6,453억	1,396억
2022	2조 3,548억	1조 4,775억	7,885억	888억
2024	2조 6,214억	1조 8,039억	7,194억	988억

출처: 지방재정365 지역통합부채현황(대전계). 자치구 5곳이 포함된 수치로, 본청 기준인 2025년 결산서 값과는 집계 범위가 다르다.

공사·공단 부채는 2016년 5,613억 원에서 2024년 7,194억 원으로 8년 동안 1,581억 원(28%) 는는데 그쳤다. 완만한 증가였다. 그런데 결산서 기준(본청 통합)으로 보면 지방공공기관 부채는 2024년 7,182억 원에서 2025년 1조 413억 원으로 한 해에 3,231억 원(45.0%) 늘었다. **지난 8년간 늘어난 금액의 두 배가 넘는 액수가 2025년 한 해에 증가한 것이다.**

VII. 종합 진단

이번 분석에서 확인한 사실은 서로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그림을 이룬다.

- **첫째, 세입은 늘었지만 스스로 버는 돈은 제자리다.** 2025년 세입 증가 8,056억 원의 98%가 국고 보조금이었다. 자체수입은 5년간 7.0% 늘어 세출 증가(14.8%)의 절반에 못 미쳤고, 비율은 36.34%에서 34.39%로 떨어졌다.
- **둘째, 빚은 살림보다 빠르게 늘었다.** 채무는 6년에 2.66배, 3년에 58% 늘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019년 8.83%에서 2024년 17.50%로 두 배가 됐다.
- **셋째, 그러나 법정 기준으로는 위험 구간이 아니다.** 재정위기·재정주의단체 지정 기준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통합재정수지비율은 기준의 5분의 1 수준이고, 예산대비 채무비율도 주의 기준까지 6.5%p 남았다.
- **넷째, 대형 사업의 이월이 급증했다.** 도시철도 2호선 이월액은 1년 사이 8.1배 늘었고, 하수도는 한 번 이월된 예산의 56%가 다시 이월됐다.
- **다섯째, 사업 자금을 시 본예산 밖에서 조달하고 있다.** 대전도시공사는 세입의 50.8%인 5,546억 원을 빌렸고, 이것이 지방공사 부채 증가의 전부다. 본청 기준 법정 지표에는 이 부담이 잡히지 않는다.

민선9기의 '재정위기' 진단은 채무 증가 속도라는 점에서는 근거가 있고, **위기로 가고 있는 방향성은 맞으나 지금 시점에서 법적 위기 상태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도시철도 2호선은 개통이 2030년 하반기로 미뤄졌다는 보도가 있고, 2025년에는 예산의 32%를 집행하지 못했다. 남은 사업비는 1조 2,000억 원대다. 앞으로 몇 년간 매년 지금보다 큰 규모의 집행이 필요하다는 뜻이며, 그만큼 추가 차입 가능성도 커진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최근 5년 평균 속도로 오르면 약 4년 뒤 주의 기준에 닿는다 [추정].

그렇다면 결산심사에서 물어야 할 것은 "돈이 없다"의 사실 여부가 아니다. **자체수입을 늘릴 계획**

이 무엇인지, 빗으로 별인 사업의 집행 계획이 현실적인지, 그리고 산하 공사의 부채까지 포함한 실제 부담이 얼마인지다.

VIII. 확인·요구 사항

2026년 9월 대전광역시의회 결산심사에서 다음 다섯 가지가 확인되기를 요청한다.

1. 대전도시공사 차입금 5,546억 원의 사업별 내역과 상환계획

세입의 절반이 넘는 규모임에도 결산서에는 총액만 기재돼 있다. 어떤 사업에 얼마를 썼는지, 상환재원과 일정은 무엇인지 확인되어야 한다. 시 지방채와 달리 의회 의결 절차 밖에 있다는 점에서 가장 시급하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도 함께 확인이 필요하다.

2. 공기업특별회계(상수도·하수도)의 미집행과 이월 이유

이월 1,005억 원(하수도 719억·상수도 286억)의 사업별 사유가 담긴 자료다. '긴급 보수' 사업의 집행률이 4.4%에 그친 이유, '도시침수 대응' 사업이 사실상 집행되지 않은 이유를 여기서 확인해야 한다. 사업별 공정과 수정 준공 시점을 함께 확인해 주기를 요청한다.

3. 2025회계연도 성과보고서와 재정혁신 71개 사업 목록

성과보고서는 사업이 무엇을 남겼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다. 아울러 2026년 7월 30일 발표된 재정혁신 방안의 조정 사업 71건(종료 8·장기재검토 29·재원조정 34) 목록과 개별 검토서가 필요하다. 2025년 결산에서 확인된 저집행 사업 가운데 어느 것이 이 목록에 포함되고 어느 것이 빠졌는지를 대조해야 조정의 기준을 검증할 수 있다.

4. 도시철도 2호선 이월 사유와 자금 흐름

- 계속비이월 1,036.9억 원을 차량제작비·공구별 공사비·감리비로 나눈 사유와 연차별 집행계획 대비 실적
- 총사업비 표기 불일치: 주요사업 추진현황(인쇄 134쪽) 1조 5,068.55억 원과 계속비이월 명세(인쇄 266쪽) 1조 4,973.87억 원의 94.68억 원 차이. 또한 계속비이월액 1,001억 원 아래 괄호로 표

기된 249.43억 원(자금없는 이월)의 의미가 설명되어 있지 않아, 같은 결산서에서 도시철도 이월 액이 1,037억 원으로도 787억 원으로도 읽힌다.

- **지방채 973억 원의 자금 흐름:** 12월 22일 590억 원 발행의 자금계획상 필요, 발행 자금의 실제 사용 시점과 대상, 신규 채권의 첫 이자 지급일과 금액. IV장 1절에서 확인한 대로 조달과 집행의 시점 괴리가 뚜렷하므로, 이자 부담이 실제로 얼마나 발생했는지는 자금관리 자료로만 확인된다.
- 개통 지연이 계속비 연차별 배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5. 채무 1조 5,864억 원의 상환계획과 미확인 재정지표

- 2025년 말 채무 1조 5,864억 원의 연차별 상환계획. 지방채증권 상환 소요만 2026년 1,642억 원·2027년 1,557억 원·2028년 1,496억 원이다. 상환 자원(순세계잉여금·일반자원·차환)을 제시해야 한다.
- 순세계잉여금 사용계획에서 기금 적립이 0원인 근거
- **법정 6지표 중 산출하지 못한 항목의 확정값:** 채무상환비 비율은 결산서 수치로 약 4.6~4.8%로 추정했으나 이자상환액의 정의에 따라 달라진다. 금고잔액비율은 원천 자료가 없고, 통합재정수지비율은 행정안전부 산식이 확정되지 않아, 지방세징수액 비율은 징수결정액 분해표가 없어 각각 산출하지 못했다. 네 지표의 2025년 확정값과 산식을 확인해 주기를 요청한다.
- **행정안전부가 통보한 2025년 지방채 발행 한도액과 소진율**

참고 자료

- 대전광역시, 「2025회계연도 결산서」(초안), 결산서 첨부서류」(수정본), 기금결산보고서」
- 대전광역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별 설명자료」, 2026.7.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결산 지표(자원별 세입결산·세출결산·회계별지방채잔액·재정자립도결산·재정자주도결산·통합재정수지비율결산·예산대비채무비율·지방공기업부채비율·보증채무비율·시도별징수율·지역통합부채현황), 2016~2024.

- 「지방재정법」 제11조·제55조의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조·제65조의3 (2026년 9월 3일 현행)

첨부 1. 예산현액 50억 원 이상·집행률 60% 미만 사업 (2025년, 18건)

<표 17> 저집행 대형사업 명단 (집행률 낮은 순, 단위: 억원)

사업명	회계	소관부서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집행잔액	국비	시도비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일반회계	건설도로과	66.0	0.6	0.9%	65.4	60.0	6.0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사업	일반회계	과학협력과	65.4	2.8	4.3%	62.5	54.7	10.6
용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일반회계	문화콘텐츠과	178.9	11.1	6.2%	167.8	89.4	89.5
보문산권역 산림복지휴양단지 조성(전환2-2)	일반회계	산림복지정책과	65.8	7.3	11.1%	58.5	0.0	65.8
국민체육센터건립(근린생활형)(전환 2-2)	일반회계	체육시설과	77.8	13.6	17.5%	64.2	9.5	68.3
보문산 수목원 매입 및 조성 등	녹지기금	확인 불가	162.3	28.7	17.7%	133.6	0.0	162.3
국민체육센터 건립(생활밀착형)(전환 2-2)	일반회계	체육시설과	111.3	33.3	29.9%	78.0	9.7	101.6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주차장 조성공사	산업단지 특별회계	산업입지과	61.4	18.5	30.1%	43.0	0.0	61.4
대전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일반회계	생태하천과	164.9	65.8	39.9%	99.1	117.0	47.9
대전추모공원 제4봉안당 건립사업	일반회계	노인복지과	101.8	41.1	40.4%	60.7	44.9	56.9

사업명	회계	소관부서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집행잔액	국비	시도비
대전역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일반회계	도시재생과	86.0	34.9	40.6%	51.1	67.8	18.2
지방하천 정비사업(전환사업)	일반회계	생태하천과	63.6	27.9	43.9%	35.7	0.0	63.6
제2대전문학관 건립	일반회계	문화유산과	77.7	36.4	46.9%	41.3	0.0	77.7
유성대로 연결도로(2구간) 개설	일반회계	건설도로과	58.9	28.3	48.0%	30.6	0.0	58.9
평촌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전환사업)	산업단지특별회계	산업입지과	79.6	40.3	50.6%	39.3	0.0	79.6
외삼~유성복합터미널 도로 건설	일반회계	교통시설과	113.3	57.9	51.1%	55.3	32.2	81.0
기후대응도시숲(직접)	일반회계	확인 불가	74.2	38.7	52.1%	35.5	37.1	37.1
기후대응도시숲 조성	일반회계	확인 불가	61.5	33.9	55.0%	27.7	30.8	30.8

출처: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 세출결산(대전본청, 2025년). 소관부서는 결산서 첨부서류 「(8) 주요사업 추진현황」(인쇄 121쪽 이하)의 주관부서 열에서 확인했다.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1건은 이 표에 없어 성질별 결산 목별조서에서 확인했고, 3건(보문산 수목원·기후대응도시숲 2건)은 어느 표에도 부서가 명시되지 않아 '확인 불가'로 두었다. 부서명은 2025년 결산서상 조직 기준으로, 2026년 조직 개편 전 명칭이다.

첨부 2. 3년 연속(2023~2025) 집행률 70% 미만 사업 (2025년 예산현액 50억 원 이상, 11건)

<표 18> 3년 연속 저집행 사업 명단 (2025년 집행률 낮은 순, 단위: 억원)

사업명	회계	2023	2024	2025	2025 예산현액	2025 지출액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일반회계	30.7%	65.6%	6.2%	178.9	11.1
국민체육센터건립(근린생활형)(전환2-2)	일반회계	11.9%	3.4%	17.5%	77.8	13.6
국민체육센터 건립(생활밀착형)(전환2-2)	일반회계	18.2%	8.9%	29.9%	111.3	33.3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주차장 조성공사	산업단지특별회계	66.5%	25.6%	30.1%	61.4	18.5
대전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일반회계	42.2%	65.9%	39.9%	164.9	65.8
대전추모공원 제4봉안당 건립사업	일반회계	46.3%	21.1%	40.4%	101.8	41.1
대전역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일반회계	53.8%	61.6%	40.6%	86.0	34.9
지방하천 정비사업(전환사업)	일반회계	65.0%	33.9%	43.9%	63.6	27.9
평촌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전환사업)	산업단지특별회계	42.9%	41.5%	50.6%	79.6	40.3
외삼~유성복합터미널 도로 건설	일반회계	34.2%	33.0%	51.1%	113.3	57.9
기후대응도시숲(직접)	일반회계	28.4%	57.4%	52.1%	74.2	38.7

출처: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 세출결산(대전본청). 사업코드로 2023·2024·2025년을 연결해 세 해 모두 집행률 70% 미만인 사업 가운데 2025년 예산현액 50억 원 이상을 골랐다. 11건 전부가 첨부 1의 18건에도 포함된다.

주: 첨부 1에만 있고 첨부 2에는 없는 7건(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보문산권역 산림복지휴양단지·보문산 수목원·제2대전문학관·유성대로 연결도로·기후대응도시숲 조성)은 2025년에 저집행이 나타났거나 3년 연속 조건에 들지 않은 사업이다.